

이 자료는 2013년 4월 16일(화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추경예산안 브리핑  
문답자료

---

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 
**2013년 추가경정예산안**  
- 문답자료 -

---

2013. 4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## 목 차

1.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것인지? ..... 1
2.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를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? ..... 2
3.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? ..... 3
4. 정부지분 감액추경이 민영화 철회를 의미하는 것인지? .. 4
5. 추경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? ..... 5
6. 이번 추경시 반영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? ..... 6
7.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? ..... 7

# 1.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지?

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

\* '11년 2/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%대 성장 지속

○ 수출 개선세가 주춤한 가운데, 소비·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

\* 1~3월 수출 평균 전년동기비 0.5% 증가

\* 광공업생산과 소비는 1~2월 연속 감소, 2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비  $\Delta$ 18.2%

○ 가계부채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, 취업자 증가세\*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

\*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: ('12.10)40 (11)35 (12)28 ('13.1)32 (2)20

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·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(“마중물” 역할)

○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한 세입부족 미조정시 당초 계획된 재정지출 이행 곤란

○ 본예산 확정 이후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 지원소요, 안전대책 등 최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출 소요 발생

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

## 2. 추경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?

- 금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규정(제89조)에 따라 “경기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”에 해당되어 추진
-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경이므로 ‘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’하는 것은 법적요건과 정책수단이 상충되는 모순
  -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며
  -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 투자자금을 대체하는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
-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
  - 민간의 소비·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
  - 정책간의 불일치(경제활성화와 증세)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

### 3.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?

□ 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하여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 
지출이 줄게 되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

⇒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

□ (국세)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징세  
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부족은 불가피

① '12.12.27일 성장률 등 경제지표 전망 하향조정에 따라  
약  $\Delta 6$ 조원 세수감소 전망

⇒ 세입경정 추경으로 대응

② '13.3월 경제지표 전망치 추가 하향조정 등에 따라 추가  
세수감소 예상

⇒ 추경예산, 부동산대책,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경기  
회복효과와 세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충당

□ (세외수입) 정부지분 매각 지연 및 축소에 따라  $\Delta 6$ 조원 감소

○ (산은) 국회의 해외채무 보증동의 절차 지연, 기업공개절차  
(약 8개월) 등으로 연내 매각이 현실적으로 곤란 :  $\Delta 2.6$ 조원

○ (기은) 최대 주주 유지를 위해 지분매각 축소 :  $\Delta 3.4$ 조원

#### 4. 금년 정부지분 매각수입 감액은 국책은행 민영화 철회를 의미하나?

□ 현재 시장상황,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은, 기은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

- 산은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 지연, IPO 절차 필수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, 물리적으로 금년 내 매각이 불가능하여 매각대(2.6조원) 전액 삭감
- 기은은 단기간내 대규모 주식 매각이 어려운 점, 새정부 중소기업 지원 의지\* 등을 감안하여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(5.1→1.7조원)

\* 정부 지분(우호지분 포함)을 50% 이상 유지 필요

□ 기은, 산은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

## 5. 추경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?

□ 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

○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 $\Delta 0.3 \rightarrow \Delta 1.8\%$

○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 $34.3 \rightarrow 36.2\%$

□ 정부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

○ 추경 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,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 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였으며,

○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, 근본적·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\*,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

\* 사업간 연계·통합, 서비스지원체계 개선, PAYGO원칙 강화 등

□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함께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, 조속한 시일내에 건전재정 회복 가능

## 6. 이번 추경시 반영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?

□ 4.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 
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

① 금리인하,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 
 주택 구입·전세자금을 4천억원 증액(6.65→7.05조원)

구 분	'13예산(A)	증액(B)	합계(A+B)	비 고(4.1 주택종합대책)
전세자금	6.6조원	+0.3조원	6.9조원	금리: 3.7→3.5%, 소득: 부부합산 4→4.5천만원
구입자금	0.05조원	+0.1조원	0.15조원	금리: 4.3→4.0%, 소득: 부부합산 4→4.5천만원

② 전세임대 추가 공급(1만7천호→2만5천호)을 통해 임대주택  
 입주대기를 최소화(1조원→1조6,240억원)

구 분	'13년 공급물량			'13년 예산		
	당초(A)	추가(B)	합계(A+B)	당초(A)	증액(B)	합계(A+B)
전세임대 주택	1만7천호	+8천호	2만5천호	1조원	+6,240억원	16,240억원

③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 
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 0.1조원 증액(0.1→0.2조원)

④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 세수  
 감소 보전을 위해 2,640억원 반영

7. 경기여건 악화로 지방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, 지방재정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이 반영되어 있는지?

□ '13년 취득세 감면연장(6개월)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약 1.3조원 반영

① '13년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약 1.0조원

②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(9개월)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약 0.3조원

□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, 복지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,

○ 국세 감액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미조정 →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

\* 국세 △6조원 감액경정시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감액(약 △2조원 수준) 요인 발생